

25.05.29.(목)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티메프사태 피해 중소기업인 등 220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티메프피해연합 ‘검은우산비대위’ 소속 피해기업인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과 소비자 200여 명이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이날 티메프사태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검은우산비대위)’ 소속 220명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검은우산비대위(비대위원장 신정권 대표)는 지지선언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티메프 사태를 민간문제로 치부하며, 어떠한 제도적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통플랫폼의 구조적 문제가 명백했지만, 정부는 책임도, 대안도 없이 사태를 외면했다.”고 정부의 티메프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재명 후보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온라인 유통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실질적 해법을 공약으로 처음 제시한 정치인”이라며 “특히 ‘온라인 시장에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약속은 중소기업인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어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지지한다.”며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공정한 대한민국,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시장을 만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검은우산비대위 지지선언에 함께한 김동아 국회의원은 “생존의 벼랑 끝에서 외면당한 지난 1년이였다. 이 고통을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겠다.”며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위한 충분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께서 ‘이제는 됐다’고 말씀해주실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병덕 위원장도 “티메프 사태는 단순한 정산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착취이며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정책재난이다.”며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표발의한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추진해 공정한 디지털 유통질서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별첨 : 지지선언문, 행사 사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지지선언문]

공정한 디지털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바라는 티메프사태 피해기업인 200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우리는 지난해 7월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정산 중단 사태로 하루아침에 매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인들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이제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절망을 품고 1년 가까이 버텨왔습니다.

최근 수많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이 대형 플랫폼의 일방적 정산 중단과 계약 해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산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유통업체의 존속과 중소기업인의 생존,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정산이 멈추면, 유통업체는 현금 흐름이 끊기며 도산 위기에 몰리고, 유통망이 끊기면 생산자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가격 불안정, 공급 차질,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막을 법도, 제도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온라인 유통시장의 불공정 문제는 방치되었고, 수많은 입점 업체들은 정산 중단과 계약 해지로 생존 위협에 시달려 왔습니다. 생산자는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 피해를 입었고, 소비자들 역시 환불 거절과 미배송 피해 속에 신뢰를 잃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심각한 사태를 끝내 민간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어떤 제도적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유통 플랫폼의 구조적 위험성은 명백했지만, 정부는 책임도,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사실상 외면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온라인 유통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공약으로 처음 제시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순한 지원이나 일회성 조치가 아닌, 유통 생태계 전반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등 불공정 행위 규제
- 폐업·재기·채무조정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는 지금까지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플랫폼 유통 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구조 개혁의 시작이며,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입점업체·생산자·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공공의 과제입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은 연간 2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이며, 수백만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그리고 수천만 소비자가 연결된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 시장이 무너지면, 중소기업과 생산자가 먼저 무너지고, 소비자와 국민경제 전체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경제,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이를 방치하고 외면한다면, 피해는 특정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밝힌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는 공약의 방향성을 열렬히 환영하며,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지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공정한 대한민국,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시장을 만들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5년 5월 28일

티메프사태 피해기업인 200명 일동

[행사 사진]

